

하나된 순천, 함께하는 일꾼

소병철 의원, '순천 위상·주민 안전·SOC', 핵심 예산 모두 챙겼다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20억원 (총사업비 467억원)
- 2021 NEXPO in 순천 개최 4억원 (총사업비 28억원)
- 순천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공사 10.96억원 (총사업비 36억원)
- 순천 땅밀림 복구사업 재해대책비 증액 (총사업비 19억원)
- 서면 선평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4천만원 (총사업비 40억원)
-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전철사업 297억원 (총사업비 1조 7,703억원)
- 화순동면~송광봉산 국도15호선 시설개량 60.87억원 (총사업비 1,126억원)

2021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지난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순천의 주요사업들도 빼곡하게 알찬 결실을 거두었다. 국제행사 개최지로서의 순천의 위상은 물론 주민의 안전과 교통 인프라 구축까지 빠짐없이 챙길 수 있는 핵심예산들을 모두 확보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친 소병철 의원(법사위)은 순천의 예산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긴급하게 편성돼 각 지역에 할당된 예산 규모가 예년보다 더 적어진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그 의미가 더 크다.

우선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국비 20억원(총사업비 467억원)이 가장 먼저 확보됐다. 박람회 개최 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으나 정부안에는 빠졌었다.

이를 알고 있던 소 의원은 국회 증액심사가 시작되자마자 이 예산부터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비 반영으로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NEXPO in 순천' 개최 예산도 4억원(총사업비 28억원)이 반영됐다. 'NEXPO in 순천'은 최근 가장 핫한

"전남도·순천시 관계 공무원 협업 덕분에 이룬 결실" "사업 발굴 매진해 매년 더 나은 성과 보여드릴 것"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5G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신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전시·체험 박람회다. 이로써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e-모빌리티, 드론, VR·AR산업에 있어서 순천이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업들도 줄줄이 확보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던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공사(현 위치) 예산이 반영된 것은 가장 큰 성과다. 이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국비 지원금액 중 일부만 반영이 돼 올해 완공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소 의원은 국비 전액 확보를 위해 정성호 예결위원장 은 물론 안도걸 예산실장을 끈질기게 설득해 극적으로 국비 10.96억원 전액(총사업비 36억원)을 반영시켰다.

순천 판교리의 땅밀림 복구사업비(총사업비 19억원)도 산림청 재해대책비 증액으로 무난하게 확보됐다.

또 우수와 오수가 분류되지 않아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선평마을의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그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있었으나 이번에 소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실시설계비 1.4억원(총사업비 40억원)이 반영됐다.

끝으로 순천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SOC예산도 빠지지 않았다. 광주송정~순천을 잇는 경전선 고속전철 건설사업(총사업비 1조7,703억원)도 정부안에는 187억만 반영돼 있었으나 국회 단계에서 110억이 증액돼 보성~순천 구간을 우선 착공해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개통시기(2023년)와 맞출 수 있도록 했다.

화순동면~송광봉산간 국도15호선의 보성 문덕~순천 송광 구간 시설개량비도 60.87억원(총사업비 1,126억원)이 반영돼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불편을 겪던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이는 순천시와 전남도 공무원들이 관계 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예결위에서 전남 예산을 담당해준 서동용 의원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결실"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도 순천시, 전남도와 힘을 합쳐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 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순천의 향후 먹거리가 될 만한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소 의원은 소년원 급식비 인상에도 힘을 기울였다. 2020년 소년원 1일 급식비는 5,680원으로 일반 중학교 1일 급식비 11,349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한끼에 2천원도 되지 않는 소년원 급식비를 최소한 6호 처분을 받는 소년이 수용되는 시설 수준으로는 맞춰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2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우리 당은 2021년 예산안을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민생예산'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비비 3조원을 담아 추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당은 국민생명과

안전, 지역활성화, 민생안정, 농업과 고용 등 8대 분야의 사업 위주로 증액하는 데에 집중했다.

우선 코로나19 예방접종 4,400만명 분 확보를 위해 9천억원을 증액했고, 35개 지방의료원의 노후의료장비 등을 현대화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위해 96억원을 증액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지원으로 ▲영유아 기관 보육료 인상을 위한 275억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621억원,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7억원,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관리 등을 위한 아동보호전담 요원 총원 36억원,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441억원,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71억원 등을 반영시켰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 지원 100억원, ▲소상공인 복지지원센터 구축 25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815억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244억원 등을 증액했다.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작물·가축재해보험 지원 366억원, ▲저수지·배수장 등 수리시설 개보수 300억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아동에 대한 과일간식 지원 72억원도 함께 확보했다.

여순사건 발생 72년 만에 특별법 제정 첫 공청회

소병철 의원, “역사의 아픔을 풀고 과거를 바로잡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1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 2 위령사업에 평화 등 인권교육 포함
- 3 재단지원사업·희생자와 유족을 위한법률지원사업 포함
- 4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생활지원금 지급
-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특례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난달 7일 여야 합의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통과를 위해 또 한 걸음 나아갔다.

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5차례 발의되었으나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갑)의 노력이 컸다. 공청회와 관련 소 의원과 사전 면담을 가졌던 서 위원장과 한병도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특별법 제

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정기회 기간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청회가 최대한 빨리 열릴 수 있게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런 노력으로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반대를 위해 상임위 일정을 모두 취소하면서도 공청회 개최를 반대하지 않아 무사히 개최될 수 있었다.

공청회에 참여한 주철희 향토역사학자는“여순사건은 국군에 의해 촉발됐고, 피해 규모가 전남·북, 경남, 경북 등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실시되면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 5천에서 최대 2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여순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반공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체제로 전환된 만큼, 특별법을 통해 사건의 배경, 원인, 전개과정, 결과와 영향까지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주 순천대 여순연구소장은“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적은 예산과 최소인력(3-5명의 조사관)만 투입함으로써 총체적 진실규명에 도달하지 못했다. 규모와 기간 등 모든 면에서 1기보다 축소된 2기 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72년이 지나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통의 점을 감안할 때, 하루 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유족들의 마음의 짐을 덜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며, 희생자 등의 한을 풀어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큰 도약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법안을 함께 성안하고 공동발의에 노력한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김희재 의원(여수을)이 참석했고, 유족을 대표해 이규종 여순사건



유족연합회장, 박소정 여순사건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이사장, 이자훈 여순사건 서울유족회장 등이 참관했다.

유족대표들은 국회에서 첫 공청회가 열린 데 대해 감격해 하며 행안위 의원들이 여순사건의 의미와 희생자, 유족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해 준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공청회가 성사되기까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1:1로 직접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지역의 학자와 유

족, 시민단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으로 행안위 제1소위가 공청회 결과를 참조해 법안심사를 완료하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상황이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이 공청회에서 충분히 표출되었으므로 향후 법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순천의 미래를 보다”

소병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온택트 토론회

…특별법으로 박람회 성공 개최와 지속발전 지원

소병철 의원은 지난 11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를 주제로 온택트 토론회를 열어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순천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진혜영 국립수목원 수목원정원연구센터 센터장은 국가정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정원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지원 △정원(문화) 콘텐츠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도시재생과 연계 △정원산업 플랫폼으로서의 국가정원 역할 증대 △유관 부처 간 협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박은영 중부대 정원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정원의 문화적·산업적 확장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되짚어보고, 신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 이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에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실현하는 근거조항을 넣는 등 진취적 법률관을 접목할 것을 주문했다.

김준선 순천대 산림자원조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 원장, 권진욱 영남대 조경학과 교수, 이기정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소병철 의원과 서동용 의원, 전남도, 순천시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유튜브 ‘소병철TV’에서 생중계하는

온택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3년 국내 최초의 국제정원박람회를 연 데 이어 10년 만에 열리는 이번 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도심전역이 축제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원문화의 미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 의원이 내년 예산안에 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면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 준비에 순풍이 불게 됐다.

소 의원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해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순천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의 위상을 강화시킬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예산의 집중적인 투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여고 바닥 교체 사업비 8.4억원 확보

소병철,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개선, 순차적 해결 약속”다짐

순천여고 교실 바닥 교체 공사가 교육부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확보된 예산은 총 8.4억원으로 노후화된 건물의 바닥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순천여고는 1940년 4월에 개교해 지난 2010년에도 바닥 교체공사를 실시했으나, 인문계고의 특성상 수많은 학생들이 장기간 머물며 학업을 한 탓에 바닥의 노후화 및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 건물 자체도 80여 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돼 지역의 교육현안으로 수년간 교체요구가 있었다.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순천여고 학생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순천여고는 80여년 동안 순천 여성교육의 장(場)이었으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원활한 학습환경을 위해 손볼 곳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공부하는 교실을 우선적으로 공사해야 했다”며 “순천여고뿐만 아니라 낙안중 강당 재건축 등 예산이 필요한 교육현안이 많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순천여고 바닥 교체 공사는 예산 집행절차 등의 문제로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업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면 올 여름방학 중 공사를 시작해 순차적으로 바닥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재해방지 특단대책 촉구와 보완방안 제시

소병철 의원, “국민들 안심 위한 노력 필요”

최근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돼 노동계 등의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소병철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5년간(2015년 ~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취지의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답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만약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이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하자, 소 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통계가 감소세로 바뀌지 않으면 법 개정에 동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어진 답변에서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모두 “앞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할 경우 법 개정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보완대책으로, 관계부처가 영세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고 그럼에도 재해가 감소되지 않으면 조속히 법을 개정하는 2단계 대안을 제시, 동의를 받아낸 것이다.

한편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피해유가족인故이한빛 PD의 아버지와故김용균씨의 어머니가 참관했으며, 개의 전에는 정의당 의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안전과 생명 보호에 예외 없어야”

소병철,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안 발의

소병철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총 445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사망사고가 15건에 이른다.

지난 6월 순천에서 30대 환경미화원이 후미 발판에 매달려 이동 중 뒤따라오는 차량에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 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

전혀 환경미화원의 안전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는 안전기준을 상위법의 단서조항으로 상향해 예외 없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안전기준에는 △청소 차량 후방영상장치 필수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원칙 △보호장구 필수 △지급 △기후 상태 안 좋을 때 작업 시간 조정 및 중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세부적인 안전기준과 적용대상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했다.

소 의원은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예외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을 통과시켜 환경미화원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제시하는
정책국감으로 ‘격이 다른 초선’ 평가

소병철 의원이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의원은 초선으로 치른 첫 국정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극한대립을 보이는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각종 현안들에 대해 치밀한 팩트 분석과 깊은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조목조

목 짚어내고 대안까지 세심하게 제시했다. 관련 보도자료도 총 27건을 발표하는 등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검찰청 국감에서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과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추락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인터넷

과 SNS에서 “사이다 발언 최고였다”, “품격있는 정치”, “선비어법” 등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하며 국감스타로 떠올랐다.

소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권력기관들의 제도개선을 견인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국감에 임했다”며 “국민들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된 만큼 국민들이 바라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 인권의 위상 제고 및 제도개선 제안 ▲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하는 법원의 엘리트주의 지적 ▲ 정치적 고려 없는 각 기관 본연의 역할 주문 등 법사위 소속 기관들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여성이나 장애인,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 폭우 피해 주민을 위한 수해 원인과약과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감사촉구 ▲ 대주그룹의 부도로 인해 10년째 소유권 등기도 못하고 있는 순천지역 ‘용당

동 대주피오레’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고려한 판결 촉구 등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살피는 지역 현안 해결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순천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개혁완성, 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를 통해 훌륭히 역할을 수행했다”며 소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소 의원은 “이번 상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소임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제력에 비례 벌금 차등부와 해야 공정한 법집행”

‘자산비례벌금제’도입 개정안 발의…소병철 의원

스웨덴 등 해외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발

했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점에서 고액벌금자의 이른바 ‘할제노역’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형을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분리해 일수는 양형기준에 따라 범행의 경중 등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을 표시하고, 일수정액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벌금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수와 일수정액을 곱한 금액이 최종 벌금액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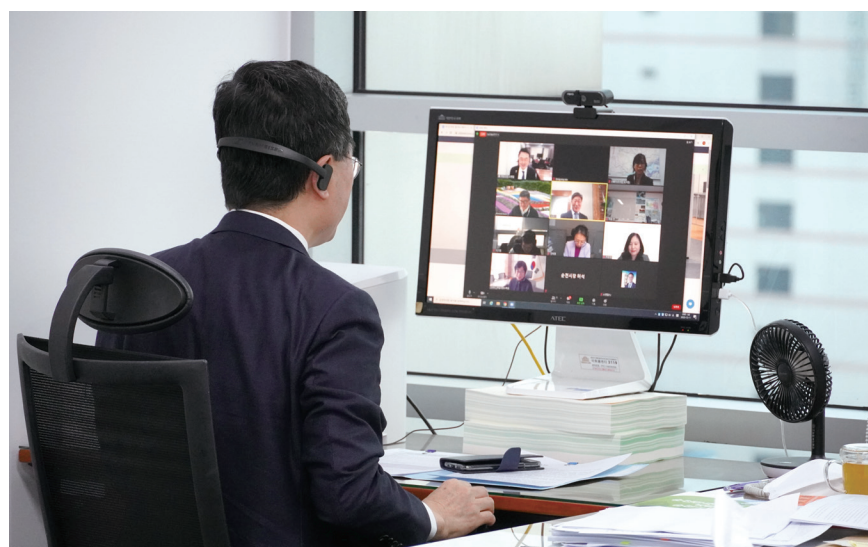
또한 기존의 노역장유치 기간은 개정법의 벌금 일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환형유치의 기준 또한 보다 명료화 했다.

벌금을 일수로 산정해 선고하는 소위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래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5년), 오스트리아(1975년), 스위스(2002년)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소 의원은 “현행 획일적·산술적 벌금 부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벌금형 산정에 재산상태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30년 넘게 논의된 내용”이라며 “형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이고 시류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 의원은 12월 22일 법 개정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을 주제로 한 온택트 세미나도 개최했다.

소병철 의원, ‘자산비례벌금제 입법방안’ 온택트 세미나



소병철 의원은 지난달 22일(화)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두시간에 걸쳐 온택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학계·국회입법조사처·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실무자가 고루 참석해 현행 벌금제의 문제점

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반국민들과 형사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현재 형벌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비례벌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해 일반인의 75.6%가 찬성입장이었고 △‘사회경제적 여건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72.6%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았으며 △‘시행시기와 방법’은 “당장 또는 1~2년 이내에 특정지역이든 특정범죄를 대상으로든 실시해보자”는 의견이 85.3%에 달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총액벌금제의 가장 큰 단점은 ‘형벌효과의 불평등’에 있다면서, 자산비례벌금제도가 실질적 평등에 더욱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제도 도입을 위해 최대벌금일수, 적용범위의 한정여부, 1일 벌금액의 산정방식, 재산상태 조사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자산(재산)비례벌금제로의 이행은 결국 의지의 문제”라면서, “오늘 논의가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해야”

소병철 의원은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가 대표적인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이라고 답변한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 스스로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지만, 파괴적 혁신을 통해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수사관행을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 후보자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공수처가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들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만큼, 단순히 또 하나의 기관 신설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소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 기소한 사건 중에 무죄가 나올 경우, 공수처 스스로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휘해야 한다”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고질적 문제점을 혁파하기 위해, 공수처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고 혹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순천 향교 대성전 보물 지정 환영”

소병철 의원은 지난달 28일 순천향교 대성전(순천시 향교길 60)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101호로 지정되어 호남 유교건축의 맥을 잇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순천향교 대성전을 비롯해 담양 창평 향교 대성전과 명륜당, 강릉 향교 명륜당 등 총 20건의 서원·향교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보물 제2101호 순천향교 대성전은 건축연혁이 분명한 17세기 중엽의 유교건축으로, 나주향교 대성전과 함께 호남을 대표하는 목조건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외 2출목* 3익공의 특징적인 공포형식, 간결하고 소박한 가구 수법 등에 시

대성 및 조선후기 유교건축의 특징이 잘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순천향교 대성전은 개방된 전위를 둔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로서 다른 향교의 대성전 건물과 비교할 때, 규모·구조·양식 및 의장적인 측면에서 웅장하고 우수하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교 대성전의 보물 지정으로 순천시는 국가지정문화재 72점과 전남 지정문화재 60점 등 총 132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소 의원은 “순천향교 대성전의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지정은 역사문화도시 순천의 자량”이라며 “새 해순천시가 문제부 선정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 순천소방서 방문 직원들 격려

빛속에서 건넌 따뜻한 위로

소병철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순천소방서를 방문, 하수철 소방서장과 환담을 나눈 뒤, 각 부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

작년 8월 고 김국환 소방장(순직)

을 보내고, 구례 수해복구로 몸까지 지쳐있을 때 찾아줬던 소병철 의원 이기에 직원 모두는 진심으로 환영했다.

소병철 의원은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길어지는 코로나 시

국에 현장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주 찾아와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그 고충을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며 직원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에 하수철 소방서장은 “지역 현안에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신년사

“경제·민생·미래 핵심 가치로 변화 선제 대응”



허 석
순천시장

뉴노멀 시대 대비
‘나눔·공동체 가치’ 위기 극복 강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현안 꼼꼼한 준비 총력

“신축년 새해 ‘경제·민생·미래’를 시정 3대 핵심가치로 설정해 새로운 일상의 변화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올해는 민선 7기를 마무리하고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한 해”라며 “나눔과 공동체 가치로 위기를 극복해온 29만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표준을 ‘순천형 스타일’로 만들겠다”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허 시장은 경제·민생·미래 3대 핵심가치로 설정해 시정 운영 방향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들 가치 중 경제 분야 핵심은 ‘실물경제 회복’이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핵심 축인 3E(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글로벌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 중관촌 한국창업 혁신센터)를 비롯, 생태경제·복지·일자리·농촌·문화관광 등

분야별 실행 과제를 설정했다.

순천시의 3E 프로젝트는 승주(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해룡산단(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 중관촌(한국창업혁신센터)을 3대 오아시스로 삼아 미래 먹거리를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생태경제는 지역 존재의 핵심 가치이자 독보적 콘텐츠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올해는 실질적인 준비 원년으로 삼아 그린 뉴딜정책의 성공모델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살기좋은 도시’답게 복지 투자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1천억원의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복지 예산이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선순환 복지형 성장모델을 구축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연대와 창업보육센터를 거점으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순천창업진흥원(가칭)을 출범시켜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하는 창업도시 건설에 매진한다는 구상이다.

시정 두 번째 가치인 민생의 경우 전 계층 분야별 맞춤형 사업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남동부권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 신대지구 상급병원 유치 등으로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또 재난재해 선제 대응을 위해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안전지수 OECD 1등급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 가치인 미래는 30만 자족도시 실현이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행정 패러다임 혁신과 순천신청사 건립 등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산인 봉화산은 순천형 센트럴파크로 조성하고 일몰 명소인 해룡와온은 선셋(Sunset) 테마의 해양 리조트를 유치해 해양치유 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AR·VR, IT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접목한(가칭) 순천 디지털 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밑그림을 그릴 방침이다.

허 시장은 “생태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순천을 위해 위대한 순천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허석 순천시장,

문화재청 방문 현안 해결 및 국비 확보 총력

팔마비, 순천 왜교성 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건의



허석 순천시장은 문화재청을 방문, 순천시 문화재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하고 박물관 건립 및 문화재 보수 관련 국비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허 시장은 이날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만나 지난해 순천향교 대성전 보물 지정과 올해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국비 확보에 따른 감사의 말을 전하고, 지방관의 선정 겸 청덕비의 효시이자 현 시대의 청렴 정신을 대표하는 문화재 ‘팔마비(八馬碑)’의 보물 지정과 정유재란 국난극복의 역사 현장인 ‘순천왜교성 전적지’의 국가 사적 승격을 요청했다.

더불어 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한 ‘불교 설화 박물관’ 건립 계획을 설명하며 정신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순천시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업무에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허 시장은 “순천은 아름다운 생태 환경과 역사적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를 방문해 2022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

공공정책대상 지방행정 부문 ‘대상’

허석 순천시장이 한국공공정책학회에서 주관한 제5회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지방행정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은 매년 대한민국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공공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략하고 수상자 발표로 대신했다.

허석 시장은 시정의 중심은 시민이어야 한다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참여, 시민주도, 시민주권을 강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한

것이 높이 평가받았다.

광장토론, 별밤토크 등 직접민주주의를 확산해 나가고 지역 공동체를 강조하며 김장나눔대축제, 코로나19 생계 어려움 해소를 위한 권분운동, 민주주의 학교 등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허 시장은 “큰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모두 순천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3E(생태·교육·경제) 프로젝트 실현으로 30만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순천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순천 ‘2020년 10대 뉴스’ 1위

순천시 인구, 광주·전주 이어 호남 3대 도시 등극

2위 순천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승인,
3위 순천형 권분운동 차지

순천시 인구가 광주와 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지난해 순천 시민들이 뽑은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이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승인과 나눔과 배려 프로젝트인 ‘순천형 권분운동 추진’이 2, 3위에 올랐다.

순천시는 지난 22일 시민이 직접 뽑은 ‘2020년 순천시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1위에 오른 ‘순천시 인구, 광주와 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 등극’은 그 동안 생태도시를 지향해 온 도시정책을 기반으로 안전, 교육, 교통,

힐링 등 중장기적인 정주여건 조성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결과다. 전남 제1의 도시를 뛰어넘어 호남 3대 도시에 올라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준 점이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위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승인이었으며 3위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눔과 배려 프로젝트 ‘순천형 권분운동’이 선정됐다.

4위는 시민과 함께한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 5위는 순천시 신청사 건립 추진, 6위는 순천만정원·습지, 2019년 전국 최고 인기 관광지 등극

이 꼽혔다. 7위는 동천 출렁다리 개통, 8위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순천의 오아시스가 되다가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밖에 9위는 순천만국가정원 대한민국상품대상 대상 수상, 10위는 호남권 최초 글로벌웹툰센터 개소가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진 힘든 시기였음에도 28만 시민과 함께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며 “2021년에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발 빠른 대응과 경제활력, 시민행복 최우선의 가치를 삼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10대 뉴스는 지난 12월 7~16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 공무원 2만8451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정됐다.

순천시, 전 시민에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키로

허석 순천시장은 14일 시청에서 비대면 영상브리핑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각각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허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있어, 설 연휴 전에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13일 기준으로 순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며, 외국인 등록이 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도 포함된다. 총 소요액은 285억 원으로 재원은 지난해 각종 행사와 축제예산 등을 절감해 마련했다.

순천시는 1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1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해 2월 초 완료를 목표로 지원금 지급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년사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2021년 첫 태양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생태를 넘어 경제도시'를 향한 순천의 새로운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저희 순천시의회는 선기원포 선측제인(先期遠布 先則制人)의 정신으로 미리 보고 멀리 보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순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앞서나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자 합니다.

2021년은 우리 순천이 동아시아 정원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순천이 지향했던 과거와 현재, 성장과 보전,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의 발전을 넘어 새로운 경제 동력이 될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와 마그네슘소재부품산업클러스터, 호남 최대 창업보육센터를 더해 지역경제를 특화·발전시켜 순천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나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순천이 신성장 동력을 통해 코로나 19의 위기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교육, 생태와 경제가 함께 세계 속에 빛나는 '글로벌 에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순천시의회가 순천시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순천시와 함께 시민의 행복을 이끌어 가는 '원팀'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진정한 자치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갈등과

대립이 아닌 건강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생산적인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28만 순천시민의 행복과 순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시의회 24명 의원 모두는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더 낮은 자세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칙과 소신을 갖고 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저희 시의회는 오직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순천의 도약을 위해 강인하고 부지런한 하얀 소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따뜻한 순천시의회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순천시의회 정례회 폐회...내년 예산 1조2871억원 확정



순천시의회는 21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등 3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확정된 순천시 2021년 예산은 총 1조2871억원으로, 당초 집행부 제출안보다 63억여원이 삭감돼 예비비로 편성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

거와 절차도 마련됐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기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지난 11월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77건의 시정·개선사항과 13건의 수범사례가 발굴됐다.

허유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

근 품력발전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면서 "찬반 양측 모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의 주장도 경청해 시민 간에 갈등을 빚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104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1년 1월29일 제248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

순천시의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임대주택 전매제한 규정 신설 등 건의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달 2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정례회에서 김미연 시의원은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 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폐지됐다"며 건의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자

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고, 임차인자격 폐지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늘어나 정작 실수요 서민들은 웃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언급했다.

또 "의무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 의무가 없고, 임차권 전매에 대한 신고 의무도 없다"며 "게다가 양도세 부과 대상도 아니어서 임차권에도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후 법 개정 시 임대주택 전매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 마련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에 우선 분양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촉구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임종기 도의원,

코로나 위기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혁신 필요 강조



임종기 도의원(순천2, 안전건설소방위)은 지난 달 8일부터 14일까지 열린 2021년도 전남도 및 전남도교육비특별

회계 예산심사에서 혁신에 방점을 두고 집행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의원은 먼저 전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이지만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산고의 고통보다 더 큰 혁신은 나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 내는 뼈를 깎는 고통 없이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집행내역을 자료요구 했으나 함흥차사다"며 "모든 것이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만 후손들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 예산심사에서는 '약무호남 시무국가' 정신을 거론하며 "한강 다리에서 한강을 바라보아야 한강이 탁한 줄을 알지 강물 속에 빠져 있으면 그 물이 더러운 줄 모른다. 관행에 젖은 안일한 생각을 넘어 도교육청이 혁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스터고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위해 교육자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전남교육의 혁신을 촉구했다.

서동욱 도의원 "브랜드화로 농업경쟁력 확보해야"



전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브랜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3)은 지난 11월 4일 전남농업기술원과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개발비 증액과 함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농업분야 연구개발비

는 최근 4년간 기관예산 총액대비 연구개발 예산액이 7.5% 감소했고,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국비 예산은 감소한 반면 도비는 증가하고 있다"며 "연구개발비 증액과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17년에 2020년까지 4년간 연구개발비 5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실용화 성공사업은 64건 123억 원에 불과하다"며 "의성 마늘과 문경 오미자의 성공 사례처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 실용화와 브랜드화를 목표로 한다면 전남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하근 도의원 '대한민국 교육대상' 인성교육대상 수상



오하근 도의원(순천4)이 지난달 22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8회 대한민국교육대상 2020' 시상식에서 '인성교육대상'

을 수상했다.

대한민국교육대상은 국내외 50여 교육신문언론 단체인 한국교육신문 연합회와 뉴스에듀신문이 주최하고, 나비미디어그룹이 주관하는 것으로 인성교육대상, 교육공헌대상, 글로벌교육브랜드대상 등을 선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오 의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제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남교육,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 등 전남교육 혁신과 인성교육에 기여를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 의원은 "이번 인성교육대상 선정은 현재 성과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전남교육 혁신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도의원, '남도장터' 글로벌화 추진 요구



김정희 도의원(순천5)은 지난달 8일 제34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남도장터'의 글로벌화 추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매출액이 300억 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의 성과를 냈다"며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대응력을 갖춰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점업체 대금결제 기간 단축, 카드수수료 적용요율 조정, 품목 품

질의 규격화 및 표준화, 충성도 높은 고객의 지속적 관리, 법인 전환 등 온라인 쇼핑몰의 규모가 커지면서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갖춰야 할 사항을 역설했다. 아울러 "도 국제협력관실에서 추진하는 해외지사화 사업, 파워인플루언서 온라인홍보 지원, 아마존 브랜드관 운영 등을 전략적으로 협업해 글로벌 온라인판매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마존'도 인터넷서점에서 시작해 지금은 세계1위의 유통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매출 300억 원 돌파에 머물지 않고 더욱 분발해 세계 속의 남도장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순천시, 전남 첫 시민주권담당관 신설

직접민주주의 확대...민주주의 정책페스티벌도 개최

순천시는 전남 최초로 신설한 시민주권담당관을 통해 민주주의가 시민의 일상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순천시청>

순천시의 시민주권담당관은 시민주권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구축과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각종 민원 및 갈등 사안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시민 중심 현장 행정을 추진하게 된다.

시민주권담당관은 시민들의 일상의 삶과 직결된 현안 등을 제안받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된다. 또 시민주권위원회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공론화 운영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제안과 직접민주주의 사업을 발굴해 시정 운영 전반에 시민참여가 이뤄지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시대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온택트(On-tact) 시민 소통 플랫폼을 구축에도 역할을 맡는다.

각종 시민 제안, 공론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참여 마일리지 평가 등을 모아 시정에 반영하고, 광장토론회·정담, 별밤토크 등의 오프라인



소통 토론회에 온라인 소통을 더한다.

아울러 작년부터 운영한 민주주의 학교, 청소년 민주주의 캠프 등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확대·개선해 시민주권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 문제를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은 시민이 주인이되면서 직접민주주의 역량도 함께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오는 10월 각종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와 시민이 함께 '순천형 민주주의 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행사를 기획하고 정책 공론장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정책 축제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순천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총괄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업체 민원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소통의 창'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원하는 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시민 속에서 찾고 시민 스스로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시민이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갖도록 직접 민주주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민호 도의원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대상' 수상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사업 제안...1석 5조 효과

신민호 도의원(순천6)이 지난달 21일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주관 온라인 시상식에서 '제3회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생활정책대상은 일상에서 발굴한 정책의제를 적극적인 입법화 과정을 거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으로 현실화한 현직 의원과 활동가들에게 주는 의미 있는 상이다. 총 99명의 정책평가위원과 심사위원들이 온라인 투표를 거쳐 3회 수상자로 광역 및 기초의원 각 9명, 자치단체장 3명, 기관 3곳이 선정됐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로 급식이 어려워지자 농가와 학부모를 모두 만족시키는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제안하고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농산물꾸러미 사업은 13개 시·도와 1개 군으로도 확산돼 499만명의 학생에게 학교 급식용 농산물 등 식자재가 공급됐고, 3만7000톤의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 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임시회 9일 당겨 개최

순천시의회가 20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13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9일 앞당겨 열리게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등 291억원 규모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13건을 심의, 의결한다.

허유인 의장은 개회사에서 집행부에 "인근 시와 재난지원금 차이에 대

한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달라"며 "정부지원금 지급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세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지원 방법 등을 추경 예산 의결 전까지 의회와 소통하고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22일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전 시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순천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선정

“동네의원서 만성질환 체계적으로 관리받는다”



순천시는 보건복지부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돼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순천시 보건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의 진료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의 관리계획을 수립해 약 복용법, 지속적인 혈압 및 혈당측정 등 모니터링,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 및 운동교육 등 1:1로 원스톱 포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는 환자들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24개의 가까운 의원을 방문해 집중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환자들은 검사비용의 본인부담률 10%만 납부하면 된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적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질병 초기부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061-749-6885)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순천시, '2021 소상공인 금융지원' 추진

순천시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은 순천시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및 7개 은행(농협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천신협)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출심사와 대출실행 등의 업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올해 지원규모는 융자금 기준 150

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의 융자 실행이 가능하며, 시는 금융기관에 2~4년간 1.9%~3%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접수는 1월 25일부터이며, 신용보증재단 순천지점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시, 청년취업자 주거비 월 10만원씩 지원

신청자격 완화로 청년 사업자도 신청 가능

순천시가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마련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12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근로 청년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년 사업자에게도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신청 자격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세(대출금 5000

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규모는 총 91명이다.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대상자,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되며, 구비서류를 준비해 순천시청 투자일자리과 청년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순천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순천시청 투자일자리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